



7월부터 달라지는 정보통신제도

지난해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 관련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용도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할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공인인증서 사용에 따른 거래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보호안전진단 수행업체도 확대된다.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만 가지고 있던 안전진단 수행권한이 15인 이상의 정보보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최근 3년이내에 정보보호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서 정보통신부 장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법인에게도 안전진단 사업권이 주어진다.

한편, 외국국적 항공기내에서도 통신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외국인에 대한 무선국 개설금지 규제가 완화되어 국경간을 운행하는 외국 국적의 항공기 이용객들도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우체통에서 발견되는 습득물 중 비재산 물건으로 분실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에 보내지 않고 분실자에게 직접 보낼 수 있다.

문의:정책홍보관리본부 홍보관리관 홍보팀
(02-750-2811)

2011년부터 이동 3사에 주파수 할당대가 부과

2011년부터 이동전화(셀룰라, PCS) 3사는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이용대가를 납부하고 주파수를 이용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시장기반 주파수관리제도 확대와 전파이용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7월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본격화와 전파기반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앞으로 주파수 수급문제에 대해 효율적 대처가 시급하다고 보고 시장기반의 주파수 관리제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먼저, 경제적 가치가 큰 이동전화(셀룰라, PCS) 주파수에 대해서는 2011년 7월부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이용대가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가를 내고 이용하는 주파수는 할당 받은 후 3년이 지나면 여유주파수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여 전파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IMT-2000, 와이브로, 위성DMB 등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주파수할당대가를 납부하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전파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토록 하였다.

또한, 와이브로, DMB 등 신규서비스 확산에 따라 도심 곳곳에 기지국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심미관 개선을 위해 그간 기지국을 공동 설치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하던 전파사용료 감면제도를 방송사업자와 자가설비시설자에게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문의:전파방송기획단 전파방송정책팀
(02-750-2417)

통신위, 이용자 보호 민원종합대책 추진

통신위원회는 통신민원이 2000년 5499건에서 2005년 3만8774건으로 5년 사이에 705%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통신민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통신서비스 시장이 포화되면서 사업자들의 과당경쟁에 의한 무리한 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통신민원은 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 이용, 해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이동통신 3사등 주요통신사업자와 함께 통신민원대책 전담반을 구성,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통신민원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 대리점 통제 강화로 민원유발 억제 〉

통신사업자들은 통신민원의 궁극적인 감소를 위해서는 민원유발행위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우선 사업자들 스스로 실천의지 표명을 위해 기만적인 상술을 쓰지 않고 관련법령을 준수하기로 하는 클린 마케팅을 홍보하기로 했다.

〈 사업자 자율에 의한 민원처리 강화 〉

통신서비스에 대한 각종 불만사항은 통신사업자 자율처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의 일차적인 상담을 거치지 않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정부의 민원처리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통신위는 밝혔다.

〈 통신위, 민원분석 통한 시장감시 강화 〉

통신위는 이번 통신민원종합대책과 이에 따른 사업자별 세부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수시모니터링 및 정기점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문의:통신위원회사무국 재정과
(02-750-1740)

정통부,

차세대이동통신 전문인력양성교육기관 선정

정보통신부는 차세대이동통신 산업의 부족한 전문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자 '차세대 이동통신인력 특별양성과정사업'을 수행할 최종 사업팀을 6월 30일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4년제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등이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사업팀)하여 신청한 8개 사업팀 중에서 한국정보통신교육원(서울), 한밭대학교(대전), 경운대학교(구미) 3개팀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팀은 교육과정 개발비, 실형·실습기자재비 등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과정에 따라 팀당 연 7억원 규모로 3년간 총 69억원을 차등하여 지원받게 된다.

이 사업은 차세대 성장동력분야에 대한 인력실태 현장수요조사 결과 인력수급이 시급한 '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이동통신 분야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가 공동 기획한 '고부가가치산업인력 특별양성과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3월 부처 T/F팀 현장수요조사 결과 3개분야 연간 2천명 이상 학부인력 긴급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은 2006년부터 여름, 겨울 방학기간 동안 선정대학 및 참여대학 등의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IT관련학과 3학년 1학기를 수료한 재학생 중 IT관련 선수 과목을 이수한 B학점 이상의 성적자 중에서 매년 240여명(3년간 850여명)을 선발하여, 12주 동안 휴대폰 S/W 및 H/W 기술(CDMA)과 개발프로젝트 실습 등 교육을 받는다.

문의:정보통신정책본부 기술정책팀
(02-750-2323)